# 여천NCC 폭발사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 대책 수립 촉구 세종충남/충북 공동기자회견

백승호 기자 | 승인 2022.02.24 12:32

> **올해만 77명 산재 사망! 여천NCC 참사 민관합동조사 보장하고 보수정당 대선 후보들은 중대 재해 근절 대책을 밝혀라!**

민주노총 세종충남/충북본부는 24일(목) 세종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천 NCC 폭발사고 민관합동조사 실시, 국가산단 근본 안전대책 수립 촉구, 보수 여야대선후보의 노동자 시민 안전대책 실종 규탄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천NCC 폭발사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 대책 수립 촉구 세종충남/충북 공동기자회견

민주노총은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이 시행된 지 채 얼마 지나지 않은 가운데 벌써 7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16명의 노동자가 급속 중독으로 쓰러졌다고 전하며, 4명의 노동자가 처참하게 쓰러져간 여천NCC 폭발사고의 경우는 오랜 기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노후 산단에서 발생했고, 두 달 전 같은 산단 이일산업의 폭발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숨진 복사판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최근 6년간 20년 이상 된 노후된 산단에서 2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9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 40년 이상 산업단지는 66명으로 65%에 달하고 있다며, 이에 민주노총은 이번 사고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이에 따른 책임자 처벌을 위해 전국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세종충남본부와 충북본부는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여천NCC 폭발사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 대책 수립 촉구 세종충남/충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이지윤 플랜트 충남지부 지부장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지윤 플랜트 충남지부장은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일하는 플랜트 노동자들도 최근 수년간 폭발, 추락, 끼임 등으로 사망사고고 줄을 이었다"라며, 노조에서 안전보건활동을 하고 있지만, 원청에서 법망을 피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을 이겨낼 수는 없다, "라고 호소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중대재해사고를 줄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여천NCC 폭발사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 대책 수립 촉구 세종충남/충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최진일 새움터 대표

최진일 새움터 대표는 "중대 재해 발생 시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현장 노동자라고 일축하며 중대재해 발생 현장에서 노동자의 참여보장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하지만 여천 사고현장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꼼수로 당사자인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며 고용노동부를 질타했다.

여천NCC 폭발사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 대책 수립 촉구 세종충남/충북 공동기자회견

민주노총은 노동자 죽음의 행진을 외면하고 정치공방에 날을 새는 보수정당 대선후보를 규탄하며, 여천NCC 폭발사고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과 중대재해 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노동부는 '중대재해 조사에서 현장 노동자들의 위험요소에 대한 요구와 기업의 수용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한다'라던 발언을 실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민주노총의 여천NCC 폭발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과 더불어 재해조사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 요구에 즉각 화답해야 하며, 국회에 계류된 건설안전특별법을 즉각 통과시키고, 국가산단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산업단지시설 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모든 중대 재해에 전면 적용되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적인 개정을 요구했다.

여천NCC 폭발사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 대책 수립 촉구 세종충남/충북 공동기자회견

여천NCC 폭발사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 대책 수립 촉구 세종충남/충북 공동기자회견

백승호 기자 nanda6636@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